

민주 “韓 대행, 내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박찬대 “안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최후 통첩
국힘 “거부권 행사 안하는 게 위헌”
권성동 “통과 즉시 권한쟁의심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물겠다”며 탄핵을 예고하며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을 묻는 방식은 탄핵소추라며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고려했다가 국정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일단 유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

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6명 헌법재판관 체제를 두 달간 유지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3명 임명안이 국회에 통과 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해서 법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밝히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불참 방침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내란 국조특위, 야당 단독 출범할 듯

위원장에 5선 안규백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출범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국정조사특위 위원 20명 중 더불어민주당 몫 11명의 명단만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이날 오후 6시까지 내란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 국조특위는 총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석 수를 기준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각각 배정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께 공지를 통해 자당 몫의 내란 국조특위 위원 11명의 명

단을 의장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을 보면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5선 안규백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3선 한병도 의원이 내정됐다.

추미애(6선·국방위), 민홍철(4선·국토위), 김교홍(3선·산업위), 백혜련(3선·복지위), 김병주(재선·국방위), 민병덕(재선·정무위) 의원과 함께 상임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재선·행안위), 김승원(재선·법사위), 박선원(초선·정보위) 의원도 국조특위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끝내 불참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경우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경찰,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 상황 재구성 본격화

참석·배석 12명중 9명 조사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규명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중 9명을 조사한 데 이어 검찰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재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따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국무회의록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경우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까지 참석자 및 배석자 12

명 중 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이다. 이 중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불참 경우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외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소환 조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중 최상목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전혀 몰랐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